

1회 :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몇 가지 성찰과 비판

[1 회]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몇 가지 성찰과 비판



2007년 4월 26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제 발표 : 도정일
(문학평론가, 경희대 명예교수, 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김규항 (칼럼니스트,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홍기돈 (문학평론가, <비평과 전망> 편집위원)

“지난 20년간의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 혹은 성숙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문화를 만들어보려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화는 아주 취약하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들로서는 민주주의의 문화를 일구는 데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3대에 걸친 문민정부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으로서의 민주적 문화를 다지는 데 투입한 정책적 노력, 장기 비전과 계획, 시민교육투자 등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민정부 3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 여부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크게 걸려 있다는 사실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그 성숙에 필요한 문화정책들을 세우고자 노력한 정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사회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회 :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몇 가지 성찰과 비판

도정일 (문학평론가, 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1. 의미

금년은 1987년 군부 집권을 지속시키려던 전두환 정권의 기도를 시민의 힘으로 좌절시킨 '6/10 민주화 대항쟁' 발발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이보다 27년 전인 1960년의 4/19 학생봉기에서부터이다. 4/19 봉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장면 정권을 탄생시키기는 했으나 그 주도 세력이 '학생' 들이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4/19 봉기에 의한 민주화의 성과가 단 1년으로 끝나고 1961년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의 등장 앞에서 허망하게 그 성과를 반납해야 했던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봉기의 주도 세력이 광범한 시민 계층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민주주의는 일시적 '해프닝' 이 아니라 긴 시일에 걸친 안착, 착근, 발전의 단계들을 요구하는 지속적 과정이다. 이 과정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적 열망' 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 이다. 이 두 가지 기본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좌절, 퇴행, 반전의 위기에 늘 봉착한다. 1987년의 민주화 대항쟁은 4/19 봉기와는 달리 시민세력이 항쟁을 주도하고 광범한 시민 계층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적 열망의 '있음' 과 그 열망의 폭발적 크기를 보여준 사건이



1987년 6월,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치던 연세대학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월 시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다. 1987년은 현대 한국이 국가 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 할 '시민의 탄생' 을 목격하고 기록한 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국민' 은 탄생했으나 그 국민은 1987년에 와서야 근대적 '민주시민' 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2. 착각

그런데 그 민주시민은 오늘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꿈꾸며 있는가? 그의 언어는 지금 어떤 문법, 어떤 열망의 코드로 조직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시민적 능력은 어찌 되었는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상당수 한국인들이 채용하는 어법은 가당찮게도 "이제 민주주의는 되었다" 라는 것이거나 "민주주의는 이제 웬만큼 되었으니" 라는 것이다. '민주화 20년' 이라는 표현 속에도 우리가 20년 전 1987년에 한번 세계 떨치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이후 20년 만에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런 어법과 태도는 극히 위험한 착각과 터무니없는 자만에서 나온다. 세계 어디에도 20년 만에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완성과 종료의 지점이 없는 '긴 과정' 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마라톤에는 종착점이 없다. 1987년 이후 20년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근사한 문민정부들을 실현한 지는 이제 겨우 15년에 불과하다. 그 15년 동안 우리가 세 번의 문민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화를 향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온 것은 분명 성취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성과가 "이제는 다 되었다" 는 식으로 감히 민주주의의 완성과 종결을 선언해도 될 자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의 힘겨운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지 어떤 수준에서도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할 단계에 있지 않다. '민주화 20년' 이라는 표현의 정당한 의미는 '민주화 지향 20년' 이고 '민주화 추진 20년' 이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과

제'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시민적 능력의 첫째 조건이다. 시민이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몰락과 반전의 위기를 만난다.



200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3. 문화적 결손

민주화의 문맥에서 지난 20년의 문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문화를 얼마만큼 일구어왔는가라는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 되지 않는다. 건국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에 법이 없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은 근대적 민주헌법이었지만 그 헌법 덕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그것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민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시민적 능력(civic virtues)들로 구성되고 그 능력들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

적 노력 일체를 포함한다. 시민적 능력, 혹은 시민적 덕목에는 자유, 평등, 공존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존중의 능력, 인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제 가치들에 대한 믿음과 실천, 비판적 사유의 능력과 이성적 판단력, 공익과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런 능력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의 토대이다. 우리는 흔히 시민의 사회적 실천 영역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쪼개어 말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문화랄 때의 문화는 '문화'라는 이름의 어떤 한정된 영역이나 예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시민의 가치관, 태도, 행동방식을 안내하는 화살표이고 규범이며 강령이다. 이런 문화가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이고 그 토양에 붙여지는 이름이 '시민문화'이다. 시민문화의 토양이 일구어지지 않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지탱과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 혹은 성숙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문화를 만들어보려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화는 아주 취약하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들로서는 민주주의의 문화를 일구는 데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3대에 걸친 문민정부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으로서의 민주적 문화를 다지는 데 투입한 정책적 노력, 장기 비전과 계획, 시민교육 투자 등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민정부 3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 여부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크게 걸려 있다는 사실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그 성숙에 필요한 문화정책들을 세우고자 노력한 정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사회를



지난 20년 동안 정치 민주화, 제도 민주화, 문화 민주화 등이 전개되었으나 기존의 사회적 권력의 권위는 부분적으로는 더 강화되었다.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배적 언론조직들과 학자들 보라. 지배적 매체조직들이 공정성, 품위, 객관성의 가치를 포기하고 허위에 대한 혐오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한국 언론의 일대 스캔들이다. 내가 아는 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적 덕목 교육을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과정에 포함시켜 필수과목으로 삼고 있는 대학은 없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나라의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일에 이토록 무관심할 수가 없다.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을 주제로 내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관심 결여와 노력 부재를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화적 결손' 으로 지적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4. '공포의 문화' 와 '지향상실'

지난 20년의 민주화 진행 과정에 등장한 문화적 변화들 가운데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현상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공포의 문화' (culture of fear)이고 다른 하나는 '지향상실' (disorientation)이다. 공포의 문화는 '삶의 안정적 영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시키는 정신적 공황상태' 이다. 이 정신 상태를 특징짓는 것은 '불안' 과 '두려움' 이다. 한국인을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한 사건 혹은 요인들은 아이엠에프 위기, 시장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직업 안정성의 심각한 동요, 빈부 양극화의 심화 등 세 가지다. 이 요인들은 모두 문민정부 3대의 집권 시기에 해당하는 지난 15년 사이에 발생하거나 심화된 것들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은 자기 삶의 안정, 가족의 안녕, 소속 집단의 미래 등이 항시적 불투명성 속으로 빠져드는 위기를 경험했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다른 모든 관심을 압도하는 제1의 관심사, 이해관계, 목표가 되기에 이른다. 불안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제1원리이다. 불안이 개인의 심리를 넘어 '집단적 정신상태' (collective mentality)로 발전하고 그 정신상태가 사람들의 행동, 선택, 가치, 목표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이 '공포의 문화' 이다. 공포의 문화가 집단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확산될 때 개인들의

삶의 플롯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제1의 목표는 '생존', 곧 '살아남기' 이다. 아이엠에프 때 지하철 역사로 물린 '노숙자' 이미지가 한국인에게 심어준 것은 연민의 정서가 아니라 순수한 공포이며, 자기 자신의 실직과 몰락의 가능성("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두려움이다. 공포의 문화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의미하다. 노숙자에게 '정치적 자유' 는 아무 의미도 없다. 자기 자신 '사회적 열패자' 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 상당수 한국인들이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도 공포의 문화가 초래한 결과의 하나이다. (공포의 문화는 사회의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이념적 정치적 텃밭이다.)

'지향상실' 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을 결속시킬 공유의 가치, 집단적 목표, 사회적 지향의 상실' 이다. 민주주의는 가치, 사상, 표현, 주장 등 문화적 창조행위에서 무엇보다도 다양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체제이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다양성의 원리로만 지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회구성요소들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묶어주고 결속시킬 공통의 가치, 삶을 안내할 공유의 목표,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 목표, 지향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회성원들의 유대와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바탕, 곧 '공동성' (commonality)이다. 다양성이 '다름' 에 무게를 둔다면 공동성은 '같음' 에 힘을 실어준다. 차이를 강조하는 다양성과 유사성 혹은 같음을 강조하는 공동성 사이에는 일정한 창조적 긴장이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문화적 원리, 공동성은 사회적 원리라는 식으로 양자를 대립관계에 놓을 필요는 없다. 두 원리는 모두 문화적 원리이다. 문화는 차이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공동성의 체계이다.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익추구가 만발하는 민주사회일수록 공동체적 결속과 유대는 필요하며 이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 공동성이다. 공동성의 공급자는 문화이다. 우리가 타인, 타 민족,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함께 나누는 어떤 공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동성은 이해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원리이다.

민주사회에서 공동성의 제 가치들은 정치적으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동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은 '문화적 가치'이다. 문화적 가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며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등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하며 해답을 모색하게 한다.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답변이 모색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문화성찰의 관점에서 말하면,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들을 잊고 산 사회에 속한다. 특히 세계화의 요청과 시장원리주의가 한국 사회를 나포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 거의 유일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

체들이 시장논리와 시장가치를 말하고 경제논리와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여러 공영역적 국면들을 살펴야 하는 정부, 각자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 방식으로 조직해야 할 시민들, 거기다 사회의 비경제적 영역들까지도 경제적 가치의 '유일가치화'에 합세하고 그 게 마치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신의 명령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린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목불인견의 참상'에 방불하다. (우리 기획예산처 관리들의 전형적인 질문 하나: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무

엇이나?)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경제적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유일가치화'이다. 이 유일화의 한국적 정도는 가위 경제가치의 '유일신화(化)'에 가깝다.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적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무용론이 아니다. 사회발전의 견인차는 경제발전이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만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다. 경제발전은 오히려 비경제적 가치들, 문화적 가치들, 인간적 가치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만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의 엔진이 된다. 경제발전은 사회의 목표가 아니다. 사회의 목표는 (좀 느슨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이다.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강력한 지향이 '민주화'였다면 지난 20년간 그 지향의 에너지가 식으면서 그 대신 자리를 차고 들어선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한 속도로) 것이 '행복 이데올로기'이다. 이 행복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행복의 수단, 모델, 목표로 떠오른 것이 부자아빠, 잘 나가는 사람, 씨이오, 미모처럼 '돈' 혹은 시장가치나 경제적 가치에 직결된 것들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행복 자체가 사회의 목표일 수는 없다. (행복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공포의 문화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5. 시장, 문화, 교육

지난 20년은 한국에서 '시장의 시대'가 열린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시장과 문화 사이의 관계 양상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이 부분을 짧게나마 성찰하는 일은 이 토론회의 정당한 화제일 수 있다. 다음은 그 성찰의 시작을 위한 몇 개의 노트이다.

가) 시장은 문화에 활력을 주었는가?

표현형식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보면 지난 20년은 문화예술 영역이 상당한 활력을 얻



성장 논리에 근거한 경제적 가치의 우월화 경향은 2007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욱 비중이 높아졌다.

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활력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 활성화의 결과라고 말하는 데는 신중한 유보가 필요하다. 문화적 표현이 활력을 얻게 된 것은 '자유'의 신장과 깊은 관계에 있다. 특히 문학, 미술, 영화, 만화, 가요 등의 예술 분야에서 창작자들을 오랫동안 옴아매고 족쇄 채워온 '검열제도'가 문민정부 15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된 것은 문화적 활력의 소생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표현



우리 사회의 집합적 내면은 풍요롭게 발전하기 보다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더 많은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된 곳에서 문화는 활기를 가질 수 없다. 이 점에서 문화적 표현의 활성화는 '민주화'의 한 효과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있거나 좀체 언급하지 않는다.

나) 시장전체주의의 진행과 독창성의 위기

시장과 문화의 관계를 말하는 데 필요한 성찰의 대상은 '시장' 메카니즘이 문화발전 에 끼치고 있는 영향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동기는 '이윤'이다. 그러나 이 이윤동기는 문화예술에 필요한 동기의 문법과는 맞지 않다. 자본주의 시대의 전개 이후 예술이 '상품'의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첫째, 시장논리와 시장가치의 유일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문화예술품의 생산과 유통에서도 이윤동기와 시장논리가 제1의 명령으로 가동되고 그 결과 '장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타산적 구분이 문화예술생산에서도 지배적인 '선택법칙'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장이 문화적 다양성을 높

인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시장전체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 하에서는 다양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다. 장사되는 것 쪽으로의 '쏠림'을 시장 메카니즘으로서는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쏠림 현상만이 아니다. 시장은 '트렌드'를 좋아한다. 장사된다고 입증된 생산물의 무자비한 표절, 베끼기, 모방, 추수 등 이른바 '카피캣'(copycats)에 의한 '트렌드' 조성 현상이 쏠림 현상과 결합한다. 그러나 적어도 예술의 경우 '트렌드 따라가기'는 예술창작의 동기도 본능도 아니다. 시장이 문화예술생산과 유통에 주는 이런 영향들은 예술적 창조성, 특히 '독창성'의 가치를 크게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창조적 능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독창적 재능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한다.

문화와 관련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문화가 활발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된다. 이 시각은 상당한, 신중한 유보를 두는 것이 좋다. 시장체제 속에서의 문화, 시장과 문화의 어떤 관계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시장주의자들의 시장예찬이 곧바로



정치적 보수화 및 유일선이 되다시피 한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이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화와 연결될 때에는 시장은 좋은 것이지만, 시장과 문화가 만났을 때, 또 문화가 시장의 논리에 지배 되어야 할 때에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창조성의 고갈, 독창성의 위기, 시장의 위협이 있다.

한때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았다. 지금은 시장이 예술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다. 그런데 이 시장의 위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비억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처럼 왜곡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은 심각하고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훨씬 더 위협하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문화가 시장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문화에 제기하는 위협 국면들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성찰하는 일이다.

질의 / 응답

홍기돈(문학평론가)



저희 연배의 세대 감각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민주화 시대에 어떤 비극적인 정서가 깔려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90년대의 정서를 보면 허무 의식이 짙게 나타납니다. 장정일의 소설 <아담이 눈 뜰 때>와 기형도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이 대표적인데, 한 두 사람 정도가 허무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의식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우리는 절망 의식에 사로잡혔을까, 비극적인 세계관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실은 민주화 20년을 경과하면서,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잔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래 민주화 정권이 15년 정도 흘렀는데, 과연 이쪽 진영에 문화적 역량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공동선이 형성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답 변

제가 생각하는 것은 80년대에 투쟁했던 시민들 중에는 정치민주와 자유, 평등의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의 열망을 가졌던 세력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자유주의나 시장주의라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자유의 확대를 외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87항쟁 이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 두 개의 세력들로 쪼개져 있습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15년간은 문화란 무엇인가 했을 때, 문화는 전쟁의 관점

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뿐 아니라 그 전의 DJ정권도 그렇고, 세계화를 내건 김영삼 정권도 그렇습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다면 지금 현재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 세계에서 빈곤 국가의 조건만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도 조금씩 시장주의자로 바뀌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 상당수가 지지하지 않을 때, 시민이 지지하지 않고, 반대할 때, 민주주의를 내건 정부 수반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맑스가 말한 세계전체가 체제 속에 들어가서 지향하고 있을 때 한 단일 국가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 된다면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국가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국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의 진보적인 지식 기반 세력과 국민의 경제적 요구를 잘 조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지난 민주화 시절의 한 측면인 셈입니다.

김규항(칼럼니스트)



87년 민주화는 한국의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한 시기였고, 다른 면으로 보면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유연화, 즉 경제적 자유주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용인하면

서, 또 그것을 밑받침 삼아서 또 다른 지배, 즉 신자유주의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을 군사 과시즘이 자본의 과시즘으로 변환 시기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IMF의 위기, 정신적 불안, 양극화 심화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현상이죠. 말씀하신 불안과 공포, 이것이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통해 연대와 저항으로 갈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지리멸렬한 개인으로 흩어지는 경향도 있을 텐데, 저는 후자의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 가치의 유일가치화가 문제인 것은 그것이 한국 사회구성원들 마음에 내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들을 돈으로 환산하고, 물질적인 사이즈나, 돈 그런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문화부분, 한류니, 문화산업이니, 허울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키운다고 볼 수 없죠. 아이들을 경쟁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내면에서 억압과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안에 의한, 이탈되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런 내면적 불안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황우석 사건이라고 봅니다. 황우석 사건의 본질은 황우석씨의 연구 성과가 가짜였느냐, 진실이었느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모든 사람이 황우석의 연구 성과를 돈의 가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황우석씨의 연구 성과가 돈으로 연결 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영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공포와 지하에 숨어있는 행복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상깊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한다. 하지만 행복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 선생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행복자체가 사회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이 좀 애석한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 사회목표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의 가치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 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야하고 행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천박하게 사용되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냥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레 적을 표하게 되었는데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개념적, 중립적 민주가 아니라 실재하는 시장의 독재와 전제 정치에 대한 저항과 해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억압되고 착취 받는 대다수 민중들이 저항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계급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선’도 이러한 계급성에 기반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계급에게 통용되는 공통된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 변

공동선의 경우 ‘한국인’이라는 자체가 허상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보면, 정말로 철저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한국인 모두를 묶어서 그들이 모두 동의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드시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동의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에는 사람의 존중과 생명의 존중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중은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대단한 문화적 가치입니다. 평화를 내걸면 뒤통무니로는 전쟁의 덕을 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평화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일단 합의하고 동의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밀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활할 수 있지만 옛날에 왕들은 민주주의화를 막기 위해 민주화세력들이 쓴 전략 가운데 그들에게도 관용, 공정성, 연대, 자연과의 상생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보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은 많이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모두 민주주의화를 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말하면서도 불평등이 왜 중요한 정의인가를 논의하고, 평등의 가치와 더불어 불평등의 가치를 나란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등 사회가 놓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것

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합의해서 정책을 펴고 우리가 경제발전이 발전하면 할수록 공동체는 무너져 갈 것입니다. 공동체적 삶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점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원자처럼 떨어져 나가는 개인들을 붙여주는 결속력으로 민주화의 공동선으로 삼아야 합니다.